

# 文대통령, '혁신성장'으로 정책 드라이브

### 내일 4차산업혁명특위 첫 주재 혁신성장 밑그림 제시

### 18일 일자리특위 주재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건다. 성장전략의 한 축인 혁신성장의 밑그림을 제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제정책 홍보에 고삐를 풀 예정이다.

두 달 간의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다음 주를 기점으로 사실상 출범 100일을 맞이한다. 경제정책의 적극적인 소개를 통해 하락세인 지지율의 반등을 꾀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에 임명장을 수여한다. 11일에는 위원회 출범 후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정부의 혁신성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부처에 빠른 개념정립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우리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경제부처는 빠른 시일 내에 혁신성장의 정책방안과 집행전략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혁신성장 정책의 틀을 마련했다. ▲혁신생태계 조성 ▲혁신거점 구축 ▲관련 규제 재설계 ▲혁신인프라 강화 등 4가지를 혁신성장의 축으로 삼고 이를 뒷받침할 세부 정책 14개를 연말까지 발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11일 첫 회의에서 기재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마련한 이같은 혁신성장의 청사진 속에 4차산업혁명의 대응 기본정책방향을 장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을 것으로 점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과학기술·산업·고용·사회 등 전문 분야별 구체적인 정책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비전은 '공정과 혁신을 바탕으로 한 사람 중심의 성장'이라는 한 줄로 압축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바탕으로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비전 4가지 축 가운데 혁신성장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구현시켜나간다는 게 대

통령의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리가 공식인 만큼 당분간 위원회를 중심으로 혁신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 18일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총원 계획과 벤처·중소기업육성방안, 4차산업혁명 대응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비서관 회의에서 공공일자리 확충방안,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정부의 경제성과를 설명하며 정책기조를 계속 이어나갈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복합 위기가 발목을 잡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제 기초는 아주 튼튼하고 굳건하다. 지난해 수출이 551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작년보다 35% 증가했다"며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져서 성장 혜택이 국민들에게 소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논의한 내용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포함해서 10월 중순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10월 하순에 관계부처가 마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무리해 당정협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 국민의당 도당, 국민정치아카데미 의원반 개강

국민의당 전북도당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정치아카데미 의원반을 개설했다.

도당은 10일 오후 1시 도당 회의실에서 사전에 선발된 50명의 수강생들이 모인 가운데 입학식을 열고 본격적인 개강에 돌입했다.

입학식 행사 뒤에 이어진 김종희 도당위원장의 입학특강에서 수강생들의 호응과 박수갈채로 열린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날 김 위원장은 특강에서 준비된 자료 없이 위원장이 걸은 길과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수강생들과 진심어린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김 위원장은 특강을 통해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 갖춰야 할 3가지 덕목이 추진력·실용성·인내심 이라 생각한다"며 수강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 위원장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힘없이 진행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추진력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특히 '실용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과거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덩소평의 '흑묘·백묘론'을 설명하며 "옛날에 고양이 키우는 목적은 쥐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쥐를 많이 잡는 것이 중요하지 고양이의 등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한 실용주의적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역사는 '통감(通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지나간 역사를 통해 자신을 비추어 배워야 한다"며 "긴 역사 속에 중요한 정치인들의 필수 덕목은 '인내심'이다"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했다.

김 위원장은 "이 3가지 덕목을 갖추고 바른 마음으로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아카데미는 제 7차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를 원하는 예비후보들을 위한 강의로 10일부터 31일까지 도당 회의실에서 매주 화요일 하루에 3강씩 진행된다. /김진성 기자

### 특검, '딸 이대 비리' 최순실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특검이 최순실(61)씨에게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최씨 등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이대 입시 및 학사 비리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주장하나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합계 기소된 이대 최경희(55) 전 총장에게는 징역 5년, 남궁권(56)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속칭 비선실세와 그 위세 및 영향력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려 한 그릇된 지식인들에 의한 교육농단 사건"이라며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100년 전통의 유명 사립 여대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반성은커녕 잘못을 감추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낮다. 특검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최씨는 정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씨가 청담고에 다니던 당시 교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은 지난 2014년에 실시된 이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체육특기자 전형에 정씨가 지원한 것을 알고 면접위원 등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전 총장은 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최 전 총장에게 징역 2년,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뉴스1

### "MB 국감 증인채택, 큰 의미 없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병계 의원은 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적폐청산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국감에서 선불리 전직 대통령을 (증인 채택)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지원의교를 총괄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지원의교는 실패와 부실 덩어리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며 "최 전 부총리는 그 중 매우 책임 있는 인물 중 한 분"이라고 날을 세웠다. /뉴스1

## 5억원 이상 경제사범 취업제한 규정 '유명무실'

### 민주당 금태섭 의원 "법무부 관리소홀... 아무 조치 안 취해"

5억원 이상 중대한 경제범죄사범에 대한 취업제한이 법률로 규정돼 있지만 법무부의 관리소홀로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죄확정 판결 후 등기 임원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전향해 임원을 유지하거나 계열사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은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융기관, 국가·지

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보조하는 기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기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금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5년6개월 간 이러한 취업제한 대상자는 총 6,459명으로 연평균 1,174명 규모다.

이 중 대다수(6,323명·97.8%)는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으로 5억원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3,000만원 이상 수재(103명) ▲사금융 알선(24명) ▲5억원 이상 재산국외도피(8명) 등이 뒤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취업제한 대상 특정경제범죄는 2012년 1,374명, 2013년 1,208명, 2014년 1,089명, 2015년 1,01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지난해(1,167명) 다시 증가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611명이 유죄 판결을 받아 지난해 평균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러한 취업제한 현황을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금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금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을 위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미승인 취업에 따른 해임요구,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

학교를 품은 마을, 지역을 살리는 교육

# 전라북도 교육특구

## 2017 포럼

혁신·농어촌·방과후학교

# 2017. 10. 16.

| 13:00~18:00 |

## 오펠리스 웨딩홀

- ▶ Session 1. 지역의 성장, 학교와 마을이 함께 꿈꾸다
- ▶ Session 2. 교육특구로 지역과 함께 풀어나가는 고등학교 정책
- ▶ Session 3. 방과후활동, 학교와 마을의 아름다운 동행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